
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전략 및 추진체계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「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」 주요내용 ..	1
II.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전략	2
III. 추진체계	4
IV. 향후 추진계획	5

I. 「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」(‘23.3.15, 비경민)」 주요내용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위해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선정

- (선정경위)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 선정하여 제안하거나 또는 기업 제안에 대해 국가 전략적 추진 필요성 고려하여 선정
- (선정기준) 기업 투자수요 100% 이상 확보, 최근 분양현황,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(선정지역) 11개 시·도, 총 15개소 선정

후보지		면적	중점산업	후보지		면적	중점산업
경기	용인 시스템반도체	710만㎡	반도체	전북	완주 수소특화	165만㎡	수소저장·활용 제조업
대전	나노·반도체	530만㎡	나노·반도체	경남	창원 방위· 원자력 융합	339만㎡	방위, 원자력
충청	천안 미래모빌리티	417만㎡	미래모빌리티, 반도체	대구	미래 스마트기술	329만㎡	미래차·로봇
	오송 철도클러스터	99만㎡	철도	경북	안동 바이오생명	132만㎡	바이오의약 (백신, HEMP)
	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	236만㎡	수소·미래차		경주 SMR (혁신원자력)	150만㎡	소형모듈원전 (SMR)
광주	미래자동차	338만㎡	미래차 핵심부품		울진 원자력수소	158만㎡	원전 활용 수소
전남	고흥 우주발사체	173만㎡	우주발사체	강원	강릉 천연물 바이오	93만㎡	천연물 바이오
전북	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	207만㎡	식품 (푸드테크)	총 15개소, 4,076만㎡			

◆ (주요 대통령 말씀) 중요한 것은 속도!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

Ⅱ.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략

1. [패키지 지원] 규제는 빼고, 정부 지원은 더하고

◆ 규제 해소, 범 부처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하여 집중 지원

□ (규제해소) 입지 규제 최소화로 지역의 주도성 최대 반영

- 비수도권 지자체 ‘그린벨트 해제권한’을 대폭 확대(30→100만㎡ 미만)
- 농지,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규제 해소

□ (집중지원) 부지개발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 병행 추진

-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산업 별 주관 부처와 협업하여 시너지 극대화

< 각 후보지 별 산업 주관 부처의 정책 연계사항 >

고흥 - 우주발사체	오송 - 철도	용인 - 반도체	익산 - 식품
과기부	국토부	산업부	농림부
			
• 나로우주센터	• KTX 오송역 • 철도기술·인증설비	• 인허가신속처리 특례 • 용적률상향	• 농식품부 5대 핵심과제 • 1단계 식품클러스터

- 지방 5대 도시의 **도심융합특구*** 개발을 본격화하여, 청년·기업 공간과 R&D·규제특례 등 지원을 통해 **첨단산업 거점**으로 육성

* 기업·인재가 모이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(H/W) + 다양한 기업지원(S/W) 결합

- 후보지 또는 인근 거점을 **첨단전략산업** 및 **소부장특화단지**로 검토하여 인·허가 신속처리, 용적률 상향 등 투자 지원방안 마련

* 국가첨단전략산업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), 소부장(미래차, 바이오 등)

- 생산, 저장·운송 등 생태계 구축위한 **수소클러스터*** 사업도 연계

◇ (완주수소) 전북 수소클러스터(그린수소생산)와 연계하여 수소산업 초격차 확보

2. [산업 생태계] 산업고도화 및 전후방 연계 투자효과 극대화

◆ **완결된 산업 생태계 통해 첨단산업 기술·시장 초격차 선도**

□ **(산업벨트) 기존 산업거점*과 연계하여 산업고도화 및 투자촉진**

* 기존 산업단지, 대학, R&D기관, 기술·인증·실증센터 등

< 주력 첨단산업 기존 산업거점과의 연계 벨트 예시 >

광주 미래차	광주글로벌모터스(GGM), 친환경차인프라 등이 소재한 빛그린산단과 연접 개발하여 R&D 기능강화 및 미래차 산업 전환 지원
안동 바이오	경북 바이오 1,2차산단 등 기존 산업 기반과 안동대(인재양성)-바이오기업(민관협력기반) 등을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 고도화
천안 모빌리티	현대차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SDI 등 기존 기업과 자동차연구원,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을 연계하여 산업 생태계 강화
창원 방위·원자력	지역생산 거점인 기존 창원 국가산단을 후방 지원하는 신규 부지를 조성하고 한국전기연구원, 국방기술품질원 등 지원기관 연계
경북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	- 원자력발전소, 연구단지, 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국내 최대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SMR 허브조성 및 수소생산기지 조성 - 포항 제철산업과 울산 조선산업까지 연계하여 환동해 경제권 강화

□ **(쏠주기 연결) 인재양성, R&D 등 통합 지원하여 시너지 창출**

○ 지방산업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**스마트혁신지구*** 등을 연계

* (지정혜택) 낙후지역내 스마트사무공간 등 구축 지원 / '23년 약 40억원 지원

◇ **(대구 미래차·로봇) 후보지 인근 대구제3산단을 스마트혁신지구로 선정('23), 앵커 기업 두산로보틱스 협업, 스마트플랫폼 구축 등 로봇 산업 고도화 지원('23년 약 40억원)**

○ **캠퍼스혁신파크** 통해 대학교 내에 산학연혁신허브(기업입주공간) 조성

* (지정혜택) 부지조성 및 산학연혁신허브 건설(국비 190억) 및 기업지원프로그램

▶ **(대전 나노·반도체)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하여 산학 협력을 촉진**

3. [수요자 중심] 기업의 Needs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개발

- ◆ 사전협의·신속절차 추진을 통해 사업기간 1/3 단축하고,
 - 획일적 부지 계획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계획 수립

□ (사업기간 단축) 적기 개발 위해 체계적 사전대응 체계 구축

- * 기존에는 관계부처 사전 협의 부족하거나, 수요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후보지 선정 후 지정까지 장기간 소요
- 농업진흥지역,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* 완료하여 관계기관 협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
 - *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계 조정, 훼손보존대책(스마트 팜) 마련 등
-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예타(조사기간 7개월→2개월 단축)로 추진하고, 공·타 심사 우선순위 부여
 - * (공공기관 타당성조사) 공공기관이 ①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면서 ②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1천억 이상 사업에 참여 시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(공공기관운영법)

□ (사업시행자 다각화) LH 외에도 철도공단, 수자원공사 등 부지여건 별로 산단 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공공기관 참여

- 지역 별 맞춤형개발 가능하도록 LH+지방공사 공동시행 방식 추진
-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시행자 선정('23.4)하고 제도개선 등* 추진
 - * 「국가철도공단법」: 철도공단 사업범위에 '산업단지 개발' 추가('22.11.29 발의)

□ (수요자 중심) 산업 별 특성 반영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기업 참여

- 투자유치 지원 및 수요 반영위해 기업이 산단 개발계획 수립 참여
- 전문가, 관계부처 등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수립방안 마련

4. [미래형 산단] 탄소중립에 대응하고, 산업 융복합을 지원

◆ 기후변화 대응,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단 구축

□ (스마트그린) 디지털·그린 경제 전환 등 글로벌 新질서에 대응

○ 향후 모든 신규 국가산단을 '스마트그린 산업단지*'로 조성

* 입주기업과 기반시설·주거·지원·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, 에너지자립, 친환경화 추진

- 산업 고도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,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

◇ (용인 반도체) 용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공공하수 정화 재이용 등 적극 도입

◇ (강릉 바이오) 연료전지, 태양광, ESS 통합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



□ (근로·정주여건) 청년이 선호하고,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 조성

○ 단순 공장 밀집에서 벗어나, 근로자·기업 경제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상업·주거·지원·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* 활성화

* 산업시설용지(공장)에 주거·편의·상업시설 등을 복합 구성하는 용지로, '14년에 도입되어 현재 기존 산단 중 구축된 사례 미미

◇ 제조업·서비스업 융합 등 지원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용지 도입

○ 일자리 확보에 중요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변 생활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및 안정적 주거공급 지원 대책 마련

-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등 출퇴근 접근성향상

- 문화, 복지, 의료 시설 서비스지원, 행복주택 등 근로자 주택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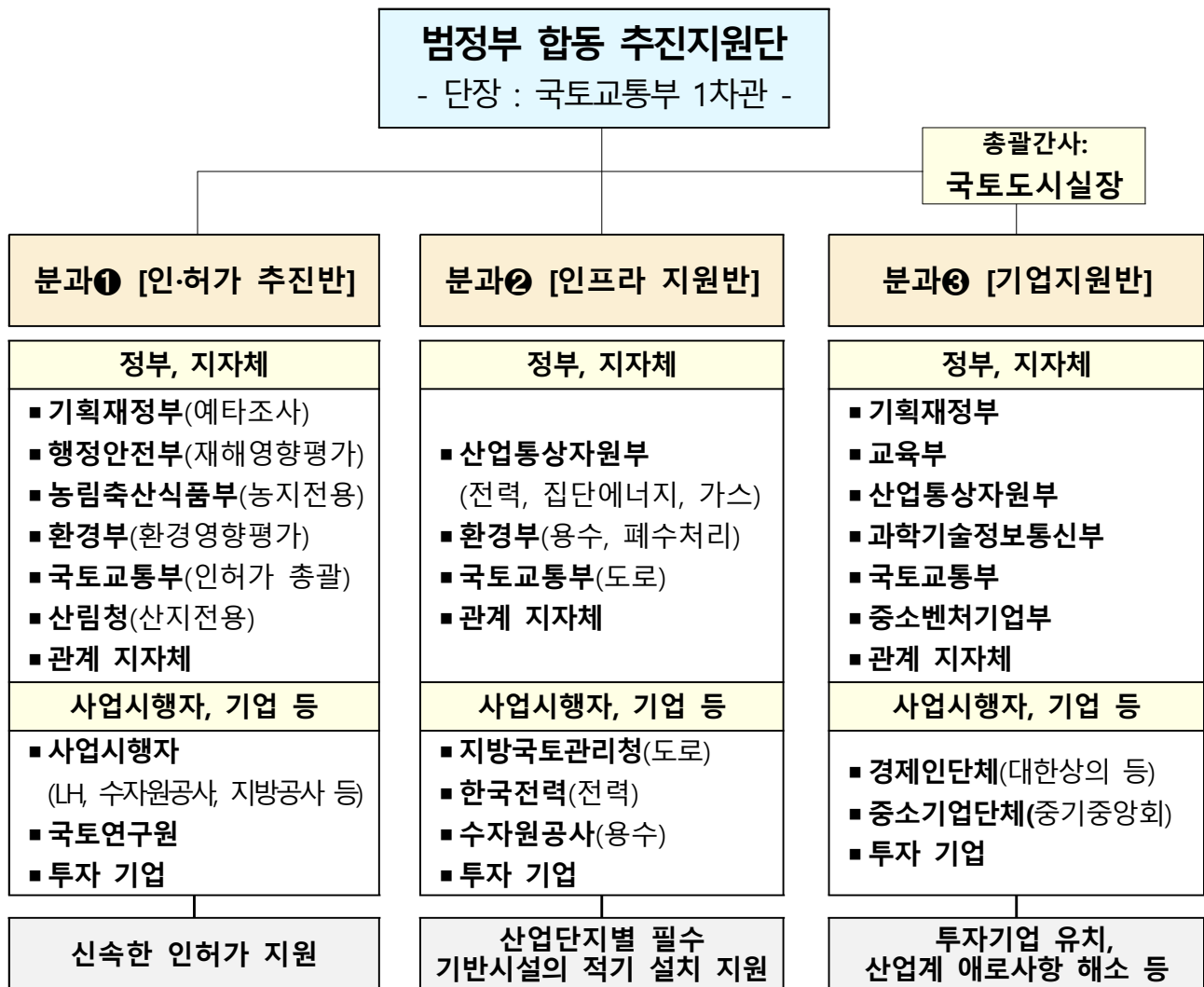
기존 산단과 국가첨단산업벨트 비교

	기존 국가산단	국가첨단산업벨트
업종	· 지역 특화 산업	· 미래 첨단전략산업 최우선 선정
입지	· 중앙 주도 획일적 입지 선정·개발	· 지역의 입지제안, 육성전략 마련
규제	· GB, 농지 등 규제 전제 하에서 추진	· 입지규제 완화 → 최적입지 공급
산업구조	· 단순 제조생산	· 산업 쉼주기 지원 생태계
토지이용	· 토지개발자 중심 획일적 부지 조성	· 기업·산업계 Needs 반영
지원방식	· 산단 별 조성·지원전략 마련	· 범정부 추진지원단 가동
개발방식	· 온실가스, 기후변화 대응 고려 無	· 스마트그린산단 조성·운영
정주여건	·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	· 주거·상업·지원·문화 복합

Ⅲ. 추진체계 : 범정부 추진지원단

◆ 신속 사업 추진, 인·허가 갈등 최소화,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민관 합동 협업체계 구축하여 범 정부 역량 결집

- (기능)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입지 규제 해소 방안 마련, 인·허가 원스톱 서비스, 기업 투자 유치 지원 등
 - (구성)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, 3개의 분과를 운영하고, 정부부처와 지자체, 기업·산업계, 사업시행자로 구성
 - ①인·허가추진반, ②인프라지원반, ③기업지원반으로 별도 분과를 운영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신속 대응
 - (추진계획) 추진지원단은 월 1회 개최, 분과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 -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, 투자 예정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춘 사업 기간 수립, 공공기관 예타조사 등 관련 용역 준비 등 신속 이행
- * 신속 사업추진 위해 국토부 내 전담조직(가칭산단개발지원센터) 마련



IV. 향후 추진계획

◆ 기업 투자 계획 등 신속 추진 필요한 경우 '26년 착공 지원

- '23. 2Q : 사업시행자 선정
 예타의뢰서 용역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추진
- '23. 4Q : 인·허가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
 * 환경영향평가, 정주여건 개선방안, 농지전용 등
- '24. ~ :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
 인·허가의제사항 협의 및 제반 영향평가
- '25. 下 :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
- '26. 下 : 단지조성공사 착공
 * 산단 여건에 따라 추진 시점은 상이할 수 있음